



2015년도 두 달 남았습니다. 11월의 첫 출근일, 한겨레 ‘세상읽기’ 칼럼, “‘한-일 화해’는 다가왔다”는 제목의 글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10월30일에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린 웹툰 ‘역사교과서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는 지금 정부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웹툰의 핵심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정적인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충격을 받는다는 부분이다. “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니” 하고 멘붕에 빠져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싫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교육 때문에 청년 자살률이 높다는 놀라운 해석과도 궤를 같이하는, ‘헬조선’의 원인도 결국 역사교육에 있다는 식의 논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화해’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웹툰을 보면서 강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20년 전 일본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가르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며,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정신적 해체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이런 흐름 속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다름 아닌 아베 신조였으며, 현재의 아베 내각은 그런 세력의 작품이기도 하다.

역사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적대적인 척하면서도, 현재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뒤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역사문제에 관한 전선은 국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아베 신조가 웃으며 악수하는 날이 왔다. 그들은 그들만의 미래를 위해 ‘화해’를 할 것이다. 그 ‘화해’ 속에서 서로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려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역사’를 알게 되어 받는 충격은 ‘나’와 국가를, 우리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이 그토록 ‘부끄러운 역사’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끄러운 역사’가 주는 그 충격과 깨달음 속에서 그들과 다른, 우리의 미래는 시작될 수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의 좌익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감시하고 비판해온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지금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3국 FTA 협상 가속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있게 된다. (jtbc, 연합뉴스)

○...“(국정화를 찬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행정예고, 오늘로 끝난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접수하는데. 추이로 보자면 접수만 하는 것 같다. 반대 의견이 압도하는 가운데서도 오는 목요일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등산객들에게 서명을 받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것이었다. (jtbc)

○...“꿈이 아니길.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이 삼성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4승 1패로 14년 만에 우승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같은 팀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정상에 오른 김태형 감독은 방금 들으신 대로 감격을 표했습니다. 삼성은 원정도박 의혹으로 주축 투수 세 명이 빠진데다 타선도 슬럼프에 빠지며 5년 연속 통합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한국야구는 다음 주말 개막하는 국제 대회 프리미어 12로 열기를 이어갑니다. (SBS)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 예스24 <http://goo.gl/ndhoaj>
- 알라딘 <http://goo.gl/AkxzHD>
-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 인터파크 <http://goo.gl/typd7E>
-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 대한공경매사협회 <http://www.kobid.co.kr>
-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 연지연곰탕 010-7252-1114

[11월 광고 완판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예약 받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중앙일보] [박승희의 시사각각] 대통령 발언은 교과서에도 실리는데

중앙일보 박승희 정치부장의 칼럼을 보자. “처음엔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 5차 회동 다음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왜 그때 (저에게) 그년, 이년 하셨어요”라고 따지듯 물었다는 얘길 듣고서다. 그런 단어가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오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가 틀렸다. 더 놀라웠던 건 이 얘기를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는 점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두 명도 아닌, 여러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공개적으로 이 발언을 전했다. ‘오프 더 레코드’ 즉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걸지도 않았다. 이상한 건 대통령의 ‘투쟁성’이 노골적으로 부각된 이 발언의 확산을 청와대도 막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려 청와대는 발언의 진위를 묻자 “있는 그대로”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은 웃으며 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중에 사석에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당신이 대통령 앞에 선 당사자라고 상상해 보라!

대통령이 하는 말은 메시지고, 통치 행위다.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다. 대중은 그 말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심리 상태를 읽는다. ‘그년, 이년’ 발언은 그래서 공포스럽다. 미필적 고의로 이 발언이 세상에 공개된 건 더 무섭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될 때까지 수십 명의 청와대 참모, 박 대통령과 가까운 야당 정치인들 중 누구 하나 그걸 막지 않았고, 막지 못했다. 내겐 그게 더 공포스럽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은 고독해진다. 짙어진 짐이 무거워서 고독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 고독하기도 하다. 빌 클린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스케줄 중 35%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사람들은 “YS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다. 역사와 대화할 땐 늘 시끄러운 일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대통령의 고독은 그렇게 무섭다. 고독할 때 대통령이 바라보는 건 대개 미래보다 과거다. 과거에는 갈등과 증오가 더 많다. 그래서 참모들은 대통령을 미래로 유도해야 하고, 대통령이 미래를 말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길게 끌어선 안 되는 것도 그래서다. 논쟁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이성’은 간데없고, 한국 사회를 친일파 vs 종북파 간 과거 들쭉시기와 집단 패싸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혼자 밥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게다가 독신이고.

[동아일보] [동아광장]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기회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 쪽에 섰다가 대선 뒤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를 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늘자 동아일보에 칼럼을 실었다. “문재인 대표는 당의 결함을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한다. 18대 대선 후에 그랬고 지난 10·28 재·보궐선거 후에도 그렇다. 책임감의 표현이 없다. 자신은 죽을 생각이 전혀 없다. 18대 대선 때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친 상태다.

그런데 뜻밖에 호기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전면전의 유인자 미끼다. 이 미끼를 제1야당이 잘못 물면 구정물에 깊게

빠져 뒤엎혀 싸우다가 같이 죽든지 아니면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미끼를 물지 않고 차분하게 두뇌싸움을 하면 제1야당은 새로운 입지를 찾을 수 있다.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세월호 재난의 엄격한 검증이 출발점이다. 조선조 왕조차도 사관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통치자의 판단을 강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신문화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 수많은 역사학자, 연구자, 지식인, 시민들이 정부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재난’이다. 여권이 합리적 보수로부터 이토록 멀리 벗어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문재인 대표는 과욕을 버리고 시민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옹호하기 바란다. 정부당국의 부당한 억압에는 분명히 맞서야 한다. 그러나 역사전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열쇠는 역사학계의 양식과 지식생산의 자율성에 있다. 우리의 희망은 깨어 있는 시민에 있다.

만일 조직된 힘으로 옛날처럼 싸우면 국민은 곧 지친다. 도망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 전면전을 유인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상투적인 시위가 아니라 열린 토론장이다. 몸싸움이 아니라 두뇌싸움이 요구된다.

박근혜 군단은 돌아설 수 없는 역사전쟁의 강을 건넜다. 낡은 이념공방, 낙인찍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역사의 기로에서 제1야당은 시민사회를 향해 멋지게 변신할 기회를 얻었다. 문재인 대표는 ‘친노’ 측근들을 과감히 내치고 당의 양심세력과 손잡아야 한다. 그 힘으로 당의 체질을 개혁하고 시민의 힘으로 역사전쟁을 이겨내야 한다.”

친노 측근 누가 문제라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역사전쟁 국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 문제인의 대결구도 대신, 박근혜 대 역사학계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문재인 사퇴 주장을 하는 여타 비노에 비하면 상당한 논리력을 갖춘 셈이다. 고도의 문제인 힘깨기로 보는 시각도 나올 수 있겠다. 한편 지난 금요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5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삼성 라이온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 7회 초 김한길 의원 부부가 경기를 관전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표는 대전역 앞에서 열린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구호를 외쳤다.



[사진=OSEN]

[세계일보] 안철수 강연정치 재개... 활동 보폭 넓힌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학을 순회하는 강연정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인다. 덕성여대에서 공정 성장론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일에는 경북대, 10일과 12일에는 각각 명지대와 국민대를 방문한다. 안 전 대표가 2011년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앞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연 정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포석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강연에서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정치혁신 방안을 통해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 혁신위와 각을 세우며 내놓은 정치 혁신안 등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론회도 검토하고 있다.

실추된 지지율을 회복하고 대권주자로서 다시 생동감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겨레] [단독] 신경숙 남편 “표절은 문학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

이른바 신경숙 표절 논란, 새 국면을 맞은 것 같다. 한겨레 최재봉 선임 기자의 기사를 보자. 최재봉 기자는 1999년 신경숙의 소설 ‘딸기밭’이 안승준의 유고집 ‘살아 있는 것이 오’의 서문을 베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원과 취재기자가 특수 관계라 하겠다.

문학평론가인 명지대 남진우 교수, 부인이 작가 신경숙 씨다. 신경숙 씨의 표절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여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례적일 만큼 우리 문단과 사회를 달구고 있는 ‘표절’과 ‘문학권력’이란 주제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현대시학 11월호 권두시론으로 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며-표절에 대한 명상 1’이라는 글 앞부분이다. 자신의 글이 신경숙 표절 사건과 그에 이은 문학권력 논쟁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선 표절이라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양심의 문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선악 이원론적 판결이 요구되는 법정으로 직행하곤 하는데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표절은 종종 텍스트의 전환, 차용, 변용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숙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숙고를 회피한 채 이루어지는 표절 논란은 대부분 무분별한 여론 재판이나 ‘잘못의 시인’ ‘선처에 대한 호소’ ‘대중의 망각’으로 이어지는 막간의 소극으로 귀결되기 쉽다”고 씩씩으로 써 신경숙 표절 논란이 ‘선악 이원론적 판결’과 ‘무분별한 여론 재판’으로 흘렀다는 판단을 내비친다.

한겨레 기자가 전화하니 “현대시학 12월호에 실릴 다음 글에서는 20세기 중후반 독일 시인과 20세기 후반 한국 저항시인의 ‘표절’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잘못하면 한국 문학 전반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서 상한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인 표절 논란 건에 대해서는 “신경숙씨는 내가 그 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이 글이 실리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에 일이 터지기 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도 모아 왔다”며 “그동안 창작에 주력하느라 손을 놓고 있었지만 더는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경숙 씨 남편의 대공세 또 이에 따른 논란이 예견된다.

[한겨레] 2년 전 고쳤는데도...교육부 ‘교과서 편향사례’로 왜곡 홍보

이번엔 국정교과서 파문 관련한 소식이다. 교육부가 국정화 홍보를 위해 개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김정 교과서의 ‘편향·왜곡’ 사례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김정 교과서의 편향·왜곡 사례는 2년 전인 2013년 김정 과정에서 이미 수정돼 현행 김정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새누리당 펼침막으로 논란이 됐던 ‘주체사상 레퍼토리’도 고수하고 있다. 진실은, 김정 교과서들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설명한 원자료를 ‘인용’하고 있을 뿐,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김정 교과서 집필자는 “주체사상 인용과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함께 제시돼 있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어떤 사료를 원자료 그대로 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3년 교육부가 집필진에게 보낸 ‘수정보완 권고서’를 보면 “자료 인용 시 가장 최근의 공신력 있는 원자료를 사용하기 바람. 특히 기존 교과서나 인터넷 정보 등을 재인용하는 방식은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론에 편승해 2013년 김정 당시엔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뒤늦게 ‘편향’으로 낙인찍는 것도 문제다. “2013년 김정 당시 역사교과서 2종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8종의 역사교과서 중 3종에서는 지금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역사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 2013년 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도, ‘(천안함 사건을 다룬다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거짓 허위 왜곡이다. 거짓 허위 왜곡을 일삼는 자들이 한 입으로는 ‘올바른 교과서’ 운운하고 있다.

[경향신문] 교육부 웹툰 ‘헬조선, 김정교과서 때문’ 시골

교육부의 흑색선전은 이뿐 아니다. 앞서 칼럼에서도 소개한 것인데, 교육부는 페이스북 계정에 “아이들의 역사교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18컷으로 이뤄진 웹툰을 게시했다. 웹툰은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 관련 내용과 한국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다는 서술을 본 여학생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싫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는 현실의 원인을 역사교과서 탓으로 돌린 것이다. 어제까지 이 게시물은 3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지나친 비약’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했다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헬조선이 헬조선이 아닌 게 되나” “행정예고 기간에 이런 만화를 뿌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교육부야 말로)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가려 한쪽 눈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적고 있다.

[경향신문] 유관순 2탄도 제작...홍보비로 2주간 22억 써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2편’이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인터넷에 공개한 뒤 TV광고로 내보내 사실 왜곡 논란을 빚은 ‘유관순 광고’ 후속편을 만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광고 하단엔 ‘유관순은 2014년까지 8종 교과서 중 2종은 기술이 안 돼 있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만 언급됐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1편 광고를 내보낸 후,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에도 유관순에 대한 서술은 없었고 김정제 전환 후 유관순 관련 서술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달 15~30일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교육부 1년 홍보예산의 2배 수준인 22억746만원을 집행했다. 이게 다 국민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상은 경향신문 기사다.

[한겨레] 황교안·최경환 ‘예비비’ 또 거짓말

한겨레 기사 본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비비 관련 발언이 ‘거짓’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세부 항목을 공개 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며 버텼지? 메르스 사태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비비 세부내역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에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최 부총리는 예결위 회의에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공개하는 것 외에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질문의 의도를 비틀어서 반박했지만, 박주선 의원은 여러 부처가 2010년 국회에다가 예비비 세부내역을 제출한 선례가 있었다며 자료를 보여줬다. 박주선 의원은 “예비비 사용 내역은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실 확인에 있어 불성실했다는 건데, 이것 또한 문제다. 국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 아닌가.

[한겨레] [단독] 김무성 부친 김용주 1961년에도 ‘친일’ 발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앞장서 주장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사는 고사하고 가족사부터 왜곡한다. 선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1961년 국회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야당과 언론 등으로부터 ‘친일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실린 1961년 1월24일 치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던 김용주는 반일감정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인들을 초청하려 무산되자 초청 의도를 해명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했다. 그는 “60만 재일교포가 일본의 사회감정과 사회대우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못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활복지가 순전히 일본 사람들의 대우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당시 일본이 재일동포 국적을 박탈하고 강제퇴거를 추진하자 정부가 “징집 등 강제로 끌려간 특수성을 인정하라”며 일본을 압박하던 상황에서 김용주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처럼 일본 편에서 발언한 것이다.

또 “한국 유학생들이 공납금을 못 내도 일본 대학이 등교를 허가한다”는 등 일본이 한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북송 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시켰지만 이것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라며 일본의 재일한인 북송 문제도 한인 탓으로 돌렸다. 그의 발언 직후 이교선 무소속 의원은 “친일권고 발언 같다. 나도 10년간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이 한국 사람을 애호해서 도와줬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따졌다. 당시 조선일보는 다음날 신문에 “김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극히 친일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야단법석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좌파들에 의해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다”던 김무성 대표, 조선일보가 좌파 신문인가.

[한겨레] 정두언 국방위원장 “어디선가 오더” 맹 비난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예결특위 심사에서 정부안인 670억원보다 증액할 뜻을 내비쳐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예결특위로 넘어온 670억 원과, 방위사업청에서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1618억 원 사이에서 조율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670억 원으로 삭감해 국회에 예산안을 넘겼다. 소관 상임 위인 국방위는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 논란까지 벌인 끝에 “11월 한 달간 국방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지난달 정부 원안 670억 원대로 예결특위로 넘겼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부는 애초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예결특위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계획해온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어디선가 오더 즉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온다.

■ [뉴스의 재구성] 정두언 “미치겠다” “아이씨”

지난 금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를 불러서 묻는데. 이 박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있어 자체 개발은 리스크가 크며,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유 의원,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은 반대 의견 수렴했느냐’라고 물었는데, 한 장관, ‘안 했다’는 말 석자를 최대한 길게 늘어 말하고. 유승민 의원과 한민구 장관의 일문일답 와중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탄식하는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듯 “미치겠다”, “(반대 의견 가진 사람을 싫으니까) 안 만났겠지”. “아이씨”를 연발했다. 이를 ‘뉴스의 재구성’이 포착했다.

[한겨레] [단독] ‘필리핀서 사망 70대’ 유족들 “정부, 몸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이슬람 반군세력인 아부사야프에 납치된 한국인 70대 남성 홍 모 씨가 납치 9개월여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정부가 (협상금이 낮아지도록) 시간을 끌며 방치해 숨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 씨의 사위는 한겨레 기자에게 “지난 6월5일 나와 처남 등 가족들이 외교부를 찾아가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철 외교부 대사는 ‘미국 등 서방국가는 테러단체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 측면 지원을 적극 하겠지만 돈을 도와줄 수는 없다. 몸값을 120억 원 넘게 요구하고 있으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우리 같은 서민이 테러단체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연로하신 장인이 필리핀 기후에서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고 했다.

가족들은 또 정부가 브로커를 소개해주며 협상을 가족들한테 떠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납치된 뒤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처남(그러니까 숨진 분의 아들)이 3개의 협상 루트를 찾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후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쪽이라며 브로커를 소개해줬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협상금 4억 원을 만들어서 줬지만, 협상하는 자리에는 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홍 씨를 포함해 올해에만 10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1월25일 이후 특히 민다나오 지역 전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위험에 처하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임을 외교부는 이 사건으로 웅변하고 있다.

[경향신문] [단독] ‘땀글 용역’ 김흥기, 장차관 동원해 ‘가짜 수료증’ 장사

이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이다. 바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오늘 특종 하나 또 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이 제기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업체에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회장으로 영입된 국정원 간부 출신 김홍기씨가 중국과학원 명의를 도용해 2년여간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무총리와 현직 장관들도 강사로 나서고, 가짜 수료증을 받은 고위직 공직자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에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 위과정’을 개설해 중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공동 주최기관으로 명시하고 중국과학원 명의로 1~4기 수강생 150여명에게 영문 수료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의 이치장 아시아담당 프로그램 매니저는 “중국과학원은 한국에 어떤 프로그램도 개설한 바 없으며 누군가 우리 대학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모집요강·수료증 등을 보여주자 ‘사기극’이라며 “한국 경찰에 고발하라. 우리도 진상조사를 거쳐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13주 교육에 1인당 교육비 600만원을 받았다.

1~4기 모집요강에 안내된 강사(당시 직책)에는 정운찬 전 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등은 명예원장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수료한 고위 공직자엔 최재우 미래부 2차관, 박수민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포함됐다. 수강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정부가 공식 후원 기관인 데다 동기생 중에도 고위 관료들이 많아 중국과학원 명의를 도용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모스크바국립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약력도 가짜로 드러났다.

[한겨레] 원세훈 재판부, 원 씨 편들기 논란…검찰 항의 퇴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금요일 서울고법 형사7부 김시철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형철 부장검사가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박 검사는, 이 사건 수사팀의 주축이었던 이복현 검사가 “검사의 말꼬투리 하나하나를 잡고,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 유감이다”라고 항의한 뒤 법정을 나왔다. 앞서 검찰은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국정원법 해석은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그게 공정하냐”며 김시철 재판장과 공판 내내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시철 재판장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을 북한의 대남 심리방송 차단 활동에 빚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기야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에 빚댔다. 김 재판장은 “손자병법을 보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등 탄력적인 용병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수천 년 전부터 제기되는 이런 주장에 대한 양쪽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형철 부장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 발언을 보면,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댓글 공작은 대북 심리전이기엔 완전한 무죄가 맞다고 보고 이를 밀고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시철 판사,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 오늘의 날씨

오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다. 날은 풀리지만 대기가 건조해 주의해 한다. 서울 등 일부 내륙과 동해안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이 흐리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 예년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다. 서울 15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된다. 금요일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오겠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건브리핑’은 한국일보 김범수 여론독자부장의 ‘편집국에서’ 칼럼을 전하며 마무리하겠다. 제목은 “국정화의 종착점”이다.

“역사에 대해, 특히 우리 근현대사에 눈이 동그해질 정도로 놀란 것은 대학에 간 뒤부터다. 거기에는 국정 교과서가 없었다. 대신 학생본부에는 동아리가 활발했고 각 학과마다 서너 개씩 ‘○○회’ 같은, 이른바 ‘의식화’ 모임이 수두룩했다. 국정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만 해왔던 대학 새내기 중에서 그런 모임에서 읽으라고 권하는, 이를 테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에 한 번쯤 눈 돌리지 않았을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 풋내기들이 다들 무슨 좌편향의 소양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대학에 오니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탓이라도 할 셈으로 그런 책을 탐독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의 왕성한 지식욕을 나무라든지, 대학에 오기 전부터 한 가지 역사만 가르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1987년 6월이 왔다. 그 후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종국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가 물어본다면 이런 체험에 기대어 이렇게 도식화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역사만 배운 청소년들은 늦더라도 결국 대학에 가면 ‘386’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동안 배웠던 것이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할 것이다. 때로 너무 기울어졌다 싶을 정도로 역사를 보려는 사람이 속출할지 모른다. 그런 일들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정권을, 사회를 바꿀 힘이 되지 말란 법 있겠나.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런 역사의 반복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물론 아니다. 검정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재단하는 기준으로 역사 관련 서적을 검열해 금서로 정하고, 좌파라고 지목하는 90%의 역사학자들을 학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97%의 역사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국정화는 결국 지난 역사의 전철을 밟고 말 것만 같다.”

김범수 부장은 설마 그렇게 하라 하는 마음에 썼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란 점에서 염려된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은 월~금 오후 6시대에 배달됩니다.]